



5면

전북 내륙-새안금, 통합 교통망 완성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음 10월 14일) 제387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12·3 불법계엄 1년... 도내 곳곳 입장 표명 “완전한 내란 종식 이루자”

민주 이원택 의원 “도민 주권정부 열어 가겠다”

민주 전북도당 “민주헌정질서 완전한 회복”

교육계 주요 인사들도 민주주의 교육 등 제언

12·3 불법계엄 1주년을 하루 앞둔 2일, 전북 정치권을 포함한 도내 각계 각층이 입장을 표명했다.

〈관련기사 3면·4면〉

▲민주 이원택 의원 “도민 주권정부 열어 가겠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도전장을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연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1년 전 국가적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의 마지막 울타리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고, ‘도민’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향후 제2, 제3의 계엄 시도가 있을 경우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민주헌정 수호 조례(가칭)’를 제정하고, 도의 운영 방향과 정책을 정할때 도민 참여 결정 구조를 운영하는 등 7가지 방향에서 도민 주권정부를 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가장 어두운 밤으로 기록된 이날 비상계엄 내란 사태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최후의 보루는 헌법을 가슴에 품은 국민이었다”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높게 평가했다.

▲민주 도당 “도민의 명령 잊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 국회의원)도 내란의 완전한 종

식으로 민주주의를 확고히 세우라는 전북자치도민의 명령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전북자치도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내란 세력 청산, 민주헌정질서의 완전한 회복과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대 전환, AI 대전환 등 국정과제를 전북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도당은 “전북도민은 가장 선두에서 비상계엄 테러로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건져내는 일에 앞장섰다”면서 “전북 국회의원들은 내란의 반역 죽음을 각오하고 국회 본회의장을 사수했고, 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북 전역의 거리와 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도민과 어깨를 걸고 함께 했으며 마침내 도민은 압도적인 지지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세웠다”고 돌아봤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정치권, 검찰, 법원 곳곳에서 압악한 내란 세력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들이 더 이상 국민주권을 흔들고 위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께서 빛의 혁명으로 준엄하게 명령하신 내란의 완전한 종식,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능력과 실용을 갖춘 전북의 인물들을 초기 내각에 다수 기용하며 전북에 힘을 실어주고, 전북을 피지컬 AI 국가 거점과 실증단지로 육성하는 등 전북엔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며 “이제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전북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정치적 역량을 결집해 전북의 대도약을 이루는 길로 더욱 성큼 뛰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도당은 “전북도민의 준엄한 명령인 내란 청산, 민주헌정질서의 회복을 완수하고 에너지대전환, AI대전환 등 이재명 정부 국정 비전을 전북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내어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결과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또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는 신념으로 도민의 삶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 오래 묵은 지역 현안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북 교육계 주요 인사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도내 교육계 주요 인사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진재배기 전북교육포럼 이남호 상임대표(전 전북대 총장)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계엄 1년을 맞아 헌법과 계엄, 민주주의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민주시민교육’ 공약을 제안했다.

이 상임대표는 “반헌법적인 12·3 비상계엄과 민주주의의 위기는 어른들의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될 교훈”이라고 밝혔다.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이하 새참교육) 노병섭 대표도 “민주주의의 교육은 국가 과제”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새참교육은 민주주의는 선언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지켜내고 배워야 하는 실천의 영역이라며,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을 통제하려 했던 비상계엄을 기억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 종식을 이뤄 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2일 전북여성가족재단 대강당에서 열린 제28회 전북소비자대회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 한국소비자원 광주호남지원장,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 관계자, 시군 소비자단체 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 주권 실현의지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소비자 주권 실현 의지 다짐 | 도, ‘제28회 전북소비자대회’ 성료 유공자 22명 표창 수여식 등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주관한 ‘제28회 전북소비자대회’가 2일 전북여성가족재단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의 날(12월 3일)을 맞아 소비자 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전주시장, 한국소비자원 광주호남지원장,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 관계자, 시군 소비자단체 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22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또한 농촌 지역 중·고등학교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지역사회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했다.

이어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기후변화와 먹거리 소비자’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 생산·유통·소비환경 변화와 대응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내용을 전달했다. 특강 이후에는 ‘소비자골든벨’ 퀴즈 대회와 소비자단체 회원 간 교류 프로그램도 열려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자치도는 행사와 연계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도청 1층 로비에서 ‘찾아가는 소비자정보전시회’를 운영하고 있다. 전시회에서는 피해 예방 요령, 합리적 소비 방법, 비대면 거래 시 소비자 주의 사항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도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고령자·어린이 대상 피해예방 인형극 교육, 청소년 경제교육, 다문화 가정·주부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 매년 8,000여명이 참여하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도내 2만 4,303개 통신판매업체 전수조사, 온라인 소비자 보호 정책 포럼 개최 등 비대면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소비생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소비자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이 안전하고 책임 있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400원 어치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의자 무죄 확정

2심서 무죄 선고... 검찰 “상고 않기로”

검찰이 세간의 관심을 받은 일명 ‘초코파이 절도사건’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주지검은 “검찰은 ‘초코파이 절도사건’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상고 미제기 사유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지난달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만원

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업무를 위해 오는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류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1심 판결이 언론에 보도되자 누리꾼들은 “1,000원 어치 과자를 가져갔다고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는 반응을 보

였고, 최근 있었던 전주지법·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지기도 했다.

검찰은 이후 시민위원회를 개최한 뒤 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선고유예를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송기사들로부터 냉장고 안 간식을 꺼내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초코파이를 꺼내먹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빅데이터 나침반으로 전북 관광 방향 잡자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상시 수집·표준 진단 등으로 연계 강화”

전북형 관광정책이 성공하려면 짧은 이동시간 체류로 바꾸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는게 관건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2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이동·혼잡·소비를 읽고 곧바로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이터 전주기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관광의 목적이 단순 관람형에서 체류·참여형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형 데이터 허브를 축으로 상시 수집-표준 진단-실시간 활용의 ‘3단 고리’를 가동해 권역 간 연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북연구원은 전북형 데이터 전주기 체계 구축을 위한 3단계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빅데이터 기반 구축을 위해 도 단위의 관광데이터 분석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각 시·군 데이터를 연계하는 광역형 데이터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민간 데이터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군별 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 체계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관련 지자체 및 지역 상인에게 개방하는 ‘전북형 축제·상권 데이터 허브’를 구축·운영하는

과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기반 교통-관광 연계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제안이 결실을 맺게 되면 데이터로 확인된 주요 이동축을 중심으로 권역별 순환형 광역관광교통망을 조성할 수 있으며, 모바일 통합패스를 도입해 접근성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추진 중인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와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만호 기자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

| 의정방침 | 소통하는 열린 의정
변화하는 혁신 의정
창의적인 선진 의정
발로 뛰는 현장 의정



순창군의회